

‘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오는 29·30일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 예정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 출생정보 통보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수정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며 “의료기관의 장이 그걸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 내 출생신고되지 않으면 그 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를 하고 최고가 없으면 직권으로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시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는 의료기관장이 심평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출생 신고가 출생일로부터 1달 이내에 되게 해야 해서 14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가 돼야 그 이후 시읍면장이 지자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가 병행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시행기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병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 “병원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출생사실과 관련된 진료 기록부만 작성하면 된다.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장이 그걸 즉시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출생신고 하더라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복지부에서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했다.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이에 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산

청하기 위한 절차를 의료기관장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해태할 이유가 없다. 별다른 의무부담이 없다”고 언급했다.

당정이 출생통보제 시행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도 시스템이 보완돼야 하고 병원행정처도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법안 시행을 공포 후 1년 후로 정했다고 했다.

출생통보제는 여아와 정부안 등 복수안이 존재했다.

다만 공통적으로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를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기록하도록 하는 구조다.

/뉴스

국내 본인인증 프로그램, 北에 뚫렸다

北, 공동인증서 해킹...공공기관·언론사 등 50개 기관 피해

북한이 국내 보안인증 소프트웨어(SW인 매직라인(MagicLine4NX))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해킹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당국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정보원은 현재까지 공공기관·방산·IT·언론사 등 50여개 기관의 PC가 매직라인 해킹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직라인은 국가·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할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PC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다.

이 소프트웨어는 한번 PC에 설치된 후 사용자가 별도로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최초 상태 그대로 PC에서 자동 실행된다. 이로 인해 일단 보안 취약점이 노출되면

해커가 해킹경로로 지속 악용할 수 있게 된다.

국정원은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과 조사한 결과 작년 말부터 북한 정찰총국이 매직라인 취약점을 악용해 온 사실을 파악했으며 정보 유출 등 세부 피해 내용은 추가 조사 중이다.

국정원은 “민·관 합동 사이버대응기구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피해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국민들의 예방 조치가 중요한 만큼 PC에 설치된 해당 소프트웨어를 조속히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민 대다수 PC에 설치되어 있는 S/W의 보안취약점이 북한 해커의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연이어 악용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

광주연구원 초대 원장 공모에 2명 신청서 제출

재단법인 광주연구원을 이끌어 갈 초대 원장 모집 공모에 두 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재광주연구원 초대 원장 조빙 공모를 했다. 접수 결과 두 명이 지원서를 냈다.

광주시는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친 뒤 이사회 의결로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 발표는 다음 달 4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 방침에 따라 광주연구원 원장 후보자도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초대 광주연구원 원장 임용 기간은 3년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12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첫 출발한 뒤 1995년 6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가 2007년 7월 전남발전연구원·광주발전연구원으로 각각 분리됐다. 이어 2015년 9월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재통합됐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재분리 논의가 급부상했으며, 논란 속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재분리 의견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시는 오는 8월 이내 광주연구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

방출설비 최종검사 개시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측 명칭 처리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출하기 위한 설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8일부터 설비 전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최종 단계의 검사를 시작했다고 현지 공영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이는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에 대해 기준치를 밑도는 농도로 희석해 올 여름까지 바다로 방출을 시작할 계획으로 26일 도쿄전력의 방출설비 공사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설비 전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최종 단계 검사를 28일부터 시작했다.

현재에는 원자력규제청 검사관 4명이 들어와 오염수 대신 처리수로 간주한 담수를 설비에 통과시켜 누설 등의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 외에 대량의 바닷물을 퍼 올리는 펌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출을 멈추는 ‘긴급 차단 밸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등을 확인한다.

원자력규제청에 따르면 검사는 빠르면 6월 말에 끝나 그 후 1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정미 대표 단식 농성장 찾은 민주노총 위원장 이정미(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단식 농성을 하던 중 단식농성장을 찾은 윤희숙(왼쪽) 진보당 상임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낙연 컴백·신당 창당·물갈이론 호남 정가 ‘술렁’

사실상 정계 복귀... ‘팬덤’ 당내 화학적 결합 관건

제22대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역 물갈이론이 드센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귀국과 정치재개, 양항자·급대섭(發) 신당창당, 진보진영의 제3지대론 등이 술가쁘게 이어지면서 지역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28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4선 의원에 전남지사,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년 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지난 24일 귀국하면서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중심으로 총선을 겨냥한 세력 결합과 확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며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의 상징색인 청록색 배타이를 맨 채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입국장

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뭣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당분간 외교·안보 강연과 정책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총선까지 9개월 남짓, 당내 경선까지는 7개월 밖에 남지 않아 광주·전남을 주축으로 세 규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강성지지층의 팬덤문화와 이른바 ‘수박 프레임’, 친이재명계와의 화학적 결합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의 신경민 전 의원은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일부 유튜브와 저질 정치인의 결합은 우리정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고, 입을 막고 손발까지 묶고 있다”며 “당도, 국가도

국민을 보고, 국민과 함께 정의의 방향으로 가야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의도 정가의 화두로 떠오른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지역 정가로까지 파장이 미칠 지도 관심사다.

우선, 지난 4월 제3지대론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급대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창당 준비모임인 ‘성찰과 모색’이 다음달 4일 광주에서 지역 첫 토론회를 연다.

‘광주시민회의’ 초청으로, ‘시민 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민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호남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만들든 같은 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무소속 양항자(광주 서구) 의원이 블록체인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지난 26일 창당한 신당 ‘한국의 희망’도 지역 정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사다.

내달부터 훈련병도 휴대전화 사용한다

병무청 “신병 교육기간에 하루 1시간씩 휴대전화 사용”

내달부터 훈련소에 입대하는 훈련병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 지침에 따라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입영하는 사람은 신병 교육기간에도 주말·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입영할 때 휴대전화·충전기 등을 지참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현재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따라 훈련병 또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병들 휴대폰 사용은 내달 3일 입영자부터 적용된다. 군 당국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

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훈련소 교육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해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군 장병은 휴대전화를 평일에는 18시~21시, 휴일에는 8시30분~21시까지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입부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 등 다양한 유형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김여사 ‘도이치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결론

경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불송치 결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추가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급음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도이치모터스의 추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시세조종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체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책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

意)가 2012년 12월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추가가 오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추가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고, 김 여사가 이 과정에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이나 권 회장의 특수관계 등으로 미뤄봤을 때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유치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호매민평 이태헌

무응답

일본오염수방류 반대 응답하세요 - 바쁘다바빠 뉘돌아보세요

환경단체 괴롭힘유무 기피뉴스 정부 비판 국정수행 불만투쟁 19대 대선 19대 대선 19대 대선

국민수행 뉘돌아보세요

대통령 불기뻐 민심 퍼

어민상인 수산업 태헌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현제도 서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에서 무전공, 자율전공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학가 전반에 퍼지지 않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지금도 학과, 학부 등 조직은 ‘학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의 틀을 제한하는 것 같다”며 “다른 분야의 전공끼리 융합하는 형태를 대학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